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분석

Analysis the Multicultural Society Impact on the Local Community

박종관
백석대학교 법정책학부

Jong Gwan Park(633127@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유입이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일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응답자는 다문화사회의 유입이 우리나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분석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 분야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 중 문화분야 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획일화된 민족주의 문화속에서 살다가 이질적인 외국인주민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서로 간의 가치관 차이와 문화충돌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외국인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결혼이민자는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를 해결하여 사회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는 물론 인구감소 현상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낮은 임금으로 취업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중심어 : | 다문화 | 다문화사회 | 지역공동체 | 민족주의 | 결혼문제 |

Abstract

In this study, the fact that the influx of multi-cultural society impact on local communities are examined to analysis the negative impact and positive impact with four types of political (government),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aw classified. Although some have a negative evaluation,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e influx of multi-cultural society had a positive impact on South Korea's development and believes a positive impact in the future. I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as where multicultural society gives the most positive impact of local communiti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economic, social, of the four segments of culture has been rated as the field of culture, on the other hand, areas that have the most negative impact has been evaluated as social sector.

Though we live in nationalism culture for a long time and heterogeneous foreign residents has so rapidly increased that conflicts due to collision of values of differences and culture of each other have occurred, foreign residents are generally, have a positive impact on our society. Substantially marriage immigrants who successfully solve the rural bachelor of marriage problem are willing to prevent population decline phenomenon and reduce the crime rate in the society, of course. In addition, foreign workers who employed at low wages in the 3D industry which is avoided by the South Korean people have contributed to our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 keyword : | Multi-cultural | Multi-cultural Society | Local Communities | Nationalism | Marriage Problem |

I.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많은 이민자들을 수용하면서 다문화 사회로 차츰 진입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적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주민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었고 미국, 일본, 필리핀, 네팔 등 각 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꾸리며 우리 국민으로써 살아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사회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주민의 지역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과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을 위해 그동안 다문화 형성에 따른 다방면의 영향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적 차원 및 사회학적 측면 중심의 한 단면의 영향분석이 아닌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지역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분야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즉, 영향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지역공동체의 영향

1) 다문화사회의 개념

다문화사회에 대해 범·제도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없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란 한 국가 내에 다양한 인종과 민족 출신이 함께 어우

러져 상호간에 다른 인종과 민족 때문에 받는 사회적 차별 없이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권리를 향유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1]. 즉, 구성원 상호간에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있는 국가의 이익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구조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고 이를 다민족사회 또는 다인종사회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2]. 한편, 여러 단일 문화가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나름의 문화를 유지·발전하고 있는 사회[3], ‘다인종 사회’라는 의미와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의 사회’라는 복합적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4][5].

2) 다문화사회의 지역공동체²⁾ 영향

첫째, 정치(행정)적 영향이다. 정치(행정)적 영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단일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포용성이 높은 사회로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에서의 다문화사회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방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또한 부분적으로 과거에는 폐쇄적이었던 지역사회 분위기가 국제화된 분위기로 바뀌고 향후 외국인주민들끼리 담합하여 지역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영향이다. 지역내에 외국인주민의 증가와 이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확대는 지역사회의 경제분위기를 바꾸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 외국인주민 그중에서도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지역 내 서비스업, 단순노무, 농업 등 3D업종에 취업하여 근무하며 지역생산에 기여하고 있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상거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정에 대한 과도한 사회복지비 증대로 일반 지역주민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일부이기는

1) 다문화사회의 특성은 외국주민의 빠른 증가, 외국근로자의 집단거주형성, 다문화가족의 보편화, 다문화 범죄건수 증가, 다문화가정의 불완전성 등이다.

2)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며,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함께 결정·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 기존의 한국인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경우도 있어 지역사회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사회적 영향이다. 다문화사회의 발전이 지역공동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 농촌 총각의 사회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5]. 외국인주민의 증가로 지역주민들에게 국제화된 인식을 심어주고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준다. 반면, 외국인주민 혐오증(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외국인주민의 범죄율·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경향도 있다.

넷째, 문화적 영향이다. 단일민족이란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면서 민족단결과 민족정신을 강조하며 국가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다문화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의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퇴색할 수 있으며 민족 정체성도 점차 약화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첫째, 한국 다문화의 정체성과 방향성,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책의 개념화 및 유형화 등에 관한 시론적·규범적 차원의 연구들이 있다. 이 부류는 김미나, 이영범·남승연, 황정미 외, 박진경·원숙연, 등이 있다. 먼저, 김미나[6]는 주요국의 다문화사회 진행단계와 다문화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다문화정책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박진경·원숙연[7]은 다문화정책의 방향성과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지지-위협인지)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영향요인(진보적 이념-단일민족 지향성-국민됨의 조건-업무경험)의 작용경로를 모형 설정하여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관련 법, 예산, 조직 및 인력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함으로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분야는 홍기원, 강휘원, 고숙희, 원숙연, 조석주 등의 연구가 있다. 홍기원[8]은 다문화

정책을 문화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분석하여 다문화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명료하게 제시함으로써 현재 관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선회가 다문화정책의 개선에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휘원[9]은 입법적,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측면에서 다문화정책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특정 외국인 유형별 다문화 정책 및 내용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셋째, 유사하거나 혹은 상이한 역사적 맥락과 정치, 경제적 배경 하에서의 선진 외국 다문화주의 및 다문화정책 사례를 소개하거나 국가 간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한국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는 연구들이 있다. 이 분야는 한승준, 한승미, 양기호 등의 연구가 있다. 한승준[10]은 다문화정책에 있어 전통적으로 동화주의 모델을 채택해 온 프랑스가 2005년 인종폭동 이후 어떤 재편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 거버넌스와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및 수단에 관한 연구들로 최근 학자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한 주요 관심 분야이다. 이 분야는 최무현, 정명주, 정평호 외, 한승준 등이 있다. 최무현[11]은 다문화사회에서의 소수자정책을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의 관점에서 유형화한 뒤, 참여정부 다문화정책의 정책대상별로 그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정평호 외[12]는 위탁과 전자 바우처라는 상이한 정책도구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서비스의 전달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위탁방식은 운영·관리의 안정성에서 바우처 방식은 투명성과 효율성에서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시론적 규범적 연구와, 다문화 정책 및 실태 분석 관련 연구, 선진국사례 소개,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추진수단 등의 연구라 할 수 있다. 즉, 다문화사회가 국가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일부 연구되었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분하여 연구한 사례는 본 연구가 최초이다[13]. 기존의 다문화 관련 논문이나 연구가 주로 다문화사회가 국가에 미친 영향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강화, 행정서비스 지원방안 등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데 비해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대부분의 다문화사회의 영향분석에 관한 연구가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현상을 주로 분석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분야를 확대하여 정치, 경제,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지표를 개발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III. 실증분석

1. 조사설계 및 분석기준

첫째, 조사설계이다. 다문화 주민들의 거주지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구진의 판단표출에 근거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3개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모집단을 3개 유형별로 구분한 것은 지역특성에 따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사회의 영향이 독립변수이고 지역사회의 영향이 종속변수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지역은 서울시 성동구, 중소도시는 경기도 군포시, 농촌지역은 충청북도 음성군을 선정하였다. 각 자치단체 별로 혼인귀화자를 포함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지역공동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지역의 본청 공무원은 다문화사회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과 또는 보육가족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각 자치단체의 3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읍면동장의 협조하에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회수율은 성동구의 경우 주민은 총 150부가 배포되어 141부가 회수되어 약 94.0%의 회수율을 보였고, 공무원은 총 92부가 배포되어 77부가 회수되어 약 83.7%의 회수율을 보였다. 군포시의 경우 주민은 총 150부가 배포되어 129부가 회수되어 약 86.0%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공무원은 총 84부가 배포되어 61부가 회수되어 약 72.6%의 회수율을 보였다. 음성군의 경우 주민은 총 150부가 배포되어 143부가 회수되어 약 95.3%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공무원은 총 96부가 배포되어 92부가 회수되어 약 95.8%의 회수율을 보였다.

둘째, 분석기준이다. 설문을 통한 의식조사를 통해 조사가 가능한 항목은 정성지표로 설정하여 의식조사를 통해 분석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분석기준은 다섯 유형이다. 먼저, 일반현황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미친 영향이 대상이다. 다음으로 정치(행정)분야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치(행정)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정치(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치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분야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또한 사회분야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사회분야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사회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이다. 이 유형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문화에 미친 영향,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등이다.

표 1. 조사지표

기준	세부기준
일반현황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일반적으로 미친 영향
정치(행정)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정치(행정)에 미친 영향 ○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정치(행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경제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경제에 미친 영향 ○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회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사회분야에 미친 영향 ○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사회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문화	○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문화에 미친 영향 ○ 향후 외국인주민의 증가가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

2. 영향분석

1) 인구통계학적 주민분석

첫째, 성별이다. 성별은 남성이 40.9%인 169명, 여성이 55.7%인 230명이며, 무응답은 3.4%인 14명이다.

표 2.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치(행정)	3	3.9	9	6.4	2	3.3	3	2.3	1	1.1	9	6.3	6	2.6	21	5.1
경제	31	40.2	45	31.9	22	36.1	32	24.8	38	41.3	55	38.4	91	39.6	132	32.0
사회	10	13.0	23	16.3	9	14.7	22	17.1	7	7.6	21	14.7	26	11.3	66	15.9
문화	30	39.0	58	41.2	25	41.0	60	46.5	40	43.5	39	27.3	95	41.3	157	38.0
기타	3	3.9	4	2.8	3	4.9	12	9.3	6	6.5	19	13.3	12	5.2	35	8.5
무응답	-	-	2	1.4	-	-	-	-	-	-	-	-	-	-	2	0.5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둘째, 연령이다. 114명(27.6%)의 응답자가 51세~60세이며, 41세~50세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104명(25.2%), 그리고 31세~40세의 연령을 가진 응답자는 75명(18.2%)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력이다. 고등학교 졸업의 응답자가 183명(44.3%), 대학교 졸업의 응답자는 152명(36.8%), 중학교 졸업의 응답자는 48명(11.6%)이 응답해주었다. 무응답자는 17명(4.1%), 대학원 졸업의 응답자는 7명(1.7%), 초등학교 졸업의 응답자는 6명(1.5%) 순이다.

넷째, 직업이다. 가정주부가 118명(28.6%), 회사원은 106명(25.7%), 상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43명(10.3%), 농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는 37명(9%)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월평균 소득이다. 월평균 소득에 대한 응답에서는 114명(27.6%)의 응답자가 200만원이상~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소득인 응답자는 100명(24.2%), 그리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77명(18.7%)으로 나타났다.

2) 인구통계학적 공무원분석

첫째, 성별이다. 공무원 전체 응답자 230명 중 남성 응답자수는 105명으로 45.6%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 응

답자는 123명으로 53.5%를 차지하고 있다. 무응답자가 2명이다

둘째, 연령이다. 전체 응답자수 230명 중 31세~40세 사이가 82명으로 35.6%를 차지하고 있고, 41세~50세 사이가 62명으로 27.1%, 51세~60세 사이가 44명으로 19.1%, 20세~30세 사이가 40명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근무기간이다. 공무원 응답자 230명 중 5년 이하 근무자가 90명(39.1%), 6~10년 근무자가 49명(21.3%), 21년~25년 근무자가 39명(17.0%), 11년~15년 근무자가 20명(8.7%), 16년~20년 근무자 13명(5.6%), 무응답자 2명(0.9%) 이다.

넷째, 학력이다. 공무원 응답자 230명 중 대학교 졸업 193명(83.9%), 고등학교 졸업 26명(12.2%), 대학원 졸업 6명(2.6%) 순이다.

3) 종합분석

첫째, 지역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이다.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공무원과 주민 모두 첫 번째로 '문화'(공무원: 41.3%, 주민: 38%)에 답하고 있으

표 3.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치(행정)	3	3.9	17	12.1	5	8.2	3	2.3	4	4.3	17	11.9	12	5.2	37	9.0
경제	10	13.0	29	20.6	2	3.3	16	12.4	10	10.9	25	17.4	22	9.6	70	16.9
사회	45	58.4	54	38.3	36	59.0	64	49.5	52	56.5	62	43.4	133	57.8	180	43.6
문화	9	11.7	16	11.3	12	19.7	26	20.2	18	19.6	29	20.3	39	17.0	71	17.2
기타	10	13.0	23	16.3	6	9.8	18	14.0	8	8.7	9	6.3	24	10.4	50	12.1
무응답	-	-	2	1.4	-	-	2	1.6	-	-	1	0.7	-	-	5	1.2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며, 두 번째로는 ‘경제’(공무원: 39.6%, 주민: 32%)라고 답하고 있다. 이를 3개 지역별로 보면 먼저 공무원의 경우 군포시와 음성군은 ‘문화’를 첫 번째로 응답한 반면, 성동구는 ‘경제’를 첫 번째로 답하고 있다. 주민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인 성동구와 군포시는 ‘문화’를 첫 번째로 응답한 반면, 농촌지역인 음성군은 ‘경제’를 응답하였다. 주민의 경우 대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과 주민 모두 ‘문화’와 ‘경제’에 많은 응답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지역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른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부 정책의 도출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의 추진은 해당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이다.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공무원(57.8%, 133명)과 주민(43.6%, 180명)이 ‘사회’라고 응답하고 있다. 3개 지역 응답자 모두 ‘사회’에 가장 많이 답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군포시와 음성군은 ‘문화’를 두 번째로 지적한 반면, 성동구는 ‘경제’를 지적하고 있다. 주민의 경우 또한 군포시와 음성군은 ‘문화’에 지적한 반면, 성동구는 ‘경제’를 지적하여 지역 간의 인식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치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4) 조사대상 유형별 분석

첫째, 정치(행정)적 분석이다.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의 정치(행정)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무원은 ‘외국인주민의 거주로 과거의 폐쇄화된 지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국제화된 사회분위기로 바뀌었음’(34.8%)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다. 반면, 주민은 ‘외국인주민 출신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교류 시, 민간외

교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음’(28.8%)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한편, 정치(행정)분야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하여 주민화합을 해치고 있음’(공무원:38.7%, 주민: 33.9%)에 공통으로 가장 많이 답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과 기존 거주주민과의 갈등해소와 주민화합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분석이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 형성으로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장 커다란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 내 서비스업, 단순노무, 농업 등 3D업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에 가장 많이 답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공무원 57.4%, 주민 30.8%).

반면, 지역경제에 미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무원은 ‘외국인주민 가정과의 화합이 잘 안되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함’(41.4%)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에 비해, 주민은 ‘기존의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음’(27.4%)에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공무원은 갈등에 따른 예산지출의 비용적 측면에서, 주민들은 외국인주민과 일터에서 일자리 경쟁을 하는 경쟁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사회측면의 분석이다. 외국인주민의 유입에 따른 다문화사회 형성으로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결혼을 통해 지역에서 거주하는 노총각 문제를 해결함’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공무원 33.9%, 주민 28.3%).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최근 외국인주민의 범죄율 ·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음’에 답하고 있다(공무원 71.7%, 주민 47.9%).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외국인주민,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와 비례해서 범죄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의 사기 국제결혼 등으로 인한 이혼률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

미지 확대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측면의 분석이다.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문화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에서 다문화축제·다문화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공무원: 31.7%, 주민: 27.6%)을 가장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그들만의 이질적인 패거리문화가 형성됨'을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다(공무원: 58.8%, 주민: 40.7%). 이와 같은 답변은 일부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원형대로 유지·발전시키되, 유입되고 있는 외국문화를 존중하는 양면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다문화사회가 형성됨에 따라 외국인주민 출신국가의 축제 또는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외국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접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의 전통문화 계승·발전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다문화사회 유입에 따른 외국인주민 출신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여 외국인주민과의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 줄이고 주민화합 정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IV. 지역공동체의 다문화사회 발전방안

1. 정치(행정)적 측면

정치(행정)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 총 응답자 113명의 49.2%

가 '인권신장'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두 번째로 69명의 30%가 '주민참여 기회 확대'라고 답하고 있다. 주민 역시 총 응답자 413명의 39.7%가 '인권신장', 32.7%가 '주민참여 기회 확대'에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결혼이민자, 외국인근자 등 소수의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신장과 주민참여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의 인권신장을 위해 거주 외국인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에서 외국인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한외국인취우기본법(2012)」 및 「다문화가족지원법(2013)」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주 외국인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아직 「거주 외국인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거주 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의 외국주민에 대한 인권 신장과 복지향상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외국인주민이 지역모임 및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도시지역에서는 반상회, 시민사회단체 모임, 아파트 주부모임, 주민자치회, 학교학부모 등의 모임에, 농촌지역에서는 농사일, 지역축제, 운동회, 동네행사 등의 모임에 적극 참여토록 권유한다. 이와 같은 장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연스러운

표 4. 정치(행정)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선거권확대	3	3.9	4	2.8	3	4.9	3	2.3	4	4.3	4	2.8	10	4.3	11	2.7
인권신장	39	50.6	48	34.0	27	44.3	51	39.5	47	51.2	65	45.5	113	49.2	164	39.7
행정서비스강화	15	19.5	24	17.0	10	16.4	22	17.1	7	7.6	35	24.5	32	13.9	81	19.6
주민참여 기회 확대	19	24.7	57	40.5	21	34.4	45	34.9	29	31.5	33	23.0	69	30.0	135	32.7
기타	1	1.3	7	5.0	-	-	5	3.9	5	5.4	2	1.4	6	2.6	14	3.4
무응답	-	-	1	0.7	-	-	3	2.3	-	-	4	2.8	-	-	8	1.9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고 특히 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또한 지역사회로의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이웃주민과 외국인주민간의 어우러질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대규모의 지역문화축제보다는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및 민속행사 등에 외국인주민을 포함시켜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경제적 측면

경제적 측면에서 외국인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임금체불 금지’를 응답한 공무원들이 가장 많았으며(32.6%, 75명), 다음으로 ‘취업기회 부여’(26.5%, 61명)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성동구 및 군포의 경우, ‘임금체불금지’(성동구: 40.3%, 군포시: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음성군의 경우 ‘취업기회 부여’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33.7%, 31명). 주민 역시 전체 응답자 중 ‘임금체불금지’(29.3%), ‘취업기회 부여’(28.8%)에 유사한 비율로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경우 ‘임금체불금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농촌지역은 ‘취업기회 부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주민에 대한 ‘임금체불 금지’를 위해서 ‘노동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른 처벌을 하도록 한다.

첫째, 직접 지불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외국인 주민에게 직접 주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이나 소개자, 브로커 등 제3자에게 주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전액지불의 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노동자에게 전부 주어야 하며,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로 저축하게 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직접 임금의 일부를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통화지불 하도록 한다. 사용자는 임금을 반드시 화폐(통화)로 주어야 하며, 통화(현금) 대신 물건으로 주지 않도록 한다. 넷째, 매월 일정 기일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을 주도록 한다.

한편, 취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인주민 중 특히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즉 한국에 가면 모국에서의 생활보다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한국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정 대부분은 우리나라 평균 가정소득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결과 결혼이민자의 취업육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재 자신들의 낮은 경제수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모국에서의 전문성 및 현재의 취업희망사항과 연계시켜 직업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인주민 중 결혼이민자에게는 자동차 운전, 요리사, 미용기술, 간병인, 수지침, 영농기술 등의 기술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반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술

표 5.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다문화 복지비용증대	8	10.4	17	12.1	12	19.7	13	10.1	9	9.8	31	21.7	29	12.6	61	14.8
취업기회 부여	18	23.4	42	29.8	12	19.7	28	21.7	31	33.7	49	34.3	61	26.5	119	28.8
직업훈련 강화	19	24.7	35	24.8	15	24.5	38	29.4	25	27.2	27	18.8	59	25.7	100	24.2
임금체불 금지	31	40.3	42	29.8	22	36.1	46	35.6	22	23.9	33	23.1	75	32.6	121	29.3
기타	1	1.2	4	2.8	-	-	2	1.6	5	5.4	1	0.7	6	2.6	7	1.7
무응답	-	-	1	0.7	-	-	2	1.6	-	-	2	1.4	-	-	5	1.2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교육은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초기 이주단계, 정착단계, 출국단계로 구분하여 교육한다. 초기 이주단계에서는 언어 및 문화 교육, 거주지역 정보, 교통·관공서·고유풍속·복지시설 이용방법·환경, 관광지 등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내국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식교육, 임금체불, 산업제해, 인권, 자녀취학, 취업, 노동법 등 노사관계 교육, 체류적법절차 및 등록절차 교육을 실시한다. 끝으로 출국단계에서는 자국에서의 정착을 위한 직업 및 정신교육, 자전거수리·보일러 수리·컴퓨터 수리 교육 등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3.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 총응답자 230명의 45.7%인 105명이 '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전환'을 답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직 낮고 차별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는 30.4%인 70명이 '주민과의 화합'에 답하고 있으며, 3개 지역별로 인식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주민의식 역시 공무원의식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많은 관심은 물론 이해를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무원과 국민들은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아직도 우리 민족에 대한 단일민족 또는 순혈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사고를 가지고 있어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백인에 비해 동남아시아인 및 아프리카인에 대한 편견은 매우 심하다.

요즈음의 세계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자국문화권 지 이미 오래고 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도 편협하고 닫힌 사고에서 벗어나 피부색깔이 다른 외국인도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드리는 개방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은 어떠한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공무원의 경우 시도 공무원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다문화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넣도록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주민 관련 특강시간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지역주민에게는 민방위교육, 문화강좌 등에서 다문화사회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강의와 홍보물을 상영하도록 하며, 지역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홍보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리더에게는 본청 대강의실에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하도록 한다.

한편,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필요하다. 지역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제도적으로 다문화사회 발전과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해도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는 주변의 이웃 주민이 이들에 대해 우리와 피부색깔이 다르다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

표 6. 사회적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민과의 화합	29	37.7	45	31.9	15	24.6	27	20.9	26	28.3	66	46.2	70	30.4	138	33.4
지역주민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전환	33	42.9	47	33.4	29	47.5	58	45.0	43	46.7	35	24.5	105	45.7	140	33.9
다양한 지역정보 제공	4	5.2	22	15.6	5	8.2	15	11.6	5	5.4	15	10.4	14	6.1	52	12.6
한국어교육 강화	11	14.2	22	15.6	12	19.7	24	18.6	15	16.3	25	17.5	38	16.5	71	17.2
기타	-	-	3	2.1	-	-	4	3.1	3	3.3	-	-	3	1.3	7	1.7
무응답	-	-	2	1.4	-	-	1	0.8	-	-	2	1.4	-	-	5	1.2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표 7. 문화적 측면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구분	성동구				군포시				음성군				합계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공무원		주민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출신국가의 고유문화·종교 존중	22	28.6	32	22.7	17	27.9	24	18.6	27	29.4	23	16.0	66	28.7	79	19.1
주기적으로 외국인주민 축제·체육대회 개최	6	7.7	19	13.5	2	3.3	11	8.5	5	5.4	45	31.5	13	5.7	75	18.2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37	48.1	59	41.8	28	45.8	51	39.5	45	48.9	44	30.8	110	47.8	154	37.3
한국의 전통문화·예절 교육 강화	11	14.3	24	17.0	12	19.7	38	29.5	14	15.2	29	20.3	37	16.1	91	22.0
기타	1	1.3	5	3.6	2	3.3	3	2.3	1	1.1	-	-	4	1.7	8	1.9
무응답	-	-	2	1.4	-	-	2	1.6	-	-	2	1.4	-	-	6	1.5
합계	77	100	141	100	61	100	129	100	92	100	143	100	230	100	413	100

동에서 소외시킨다면 외국인주민이 우리 국민, 이웃 주민으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주민의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과 배려이다.

4. 문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외국인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라고 답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출신국가의 고유문화·종교 존중’이라고 응답한 수가 2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주민은 총 응답자 413명 중 37.3%가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주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응답자의 22.0%가 ‘한국의 전통문화·예절교육 강화’에 두 번째로 답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우리 국민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주민과 우리 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 개최, 외국인주민 출신국가의 문화·종교 존중, 한국의 전통문화·예절교육 강화를 통해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다문화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이웃주민과 외국인주민간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주민과 한국의 이웃 주민이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한다. 행사는 대규모의 지역문화축제

보다는 지역이 오랜 기간 동안 고수하고 진행시켜 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문화축제 및 민족행사 등에 외국인주민을 초대하여 문화축제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주민의 한국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에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의 전통문화, 예절, 교양교육 등을 실시한다.

V. 결론

본 연구결과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 분야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문화의 네 분야 중 문화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야는 사회분야라고 평가하고 있다.

첫째, 정치(행정) 분야이다. 이 분야는 공무원과 주민간에 차이가 있다.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의 정치(행정)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은 ‘외국인주민의 거주로 과거의 폐쇄화된 지역사회에서 부분적으로 국제화된 사회분위기로 바뀌었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 주민은 ‘외국인주민 출신국가 또는 지자체와의 교류 시 민간외교의 연결고리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가가 지역공동체의 정치(행정)에 미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지역주민의 갈등을 야기하여 주민화합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둘째, 경제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다문화사회

가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내 서비스업, 단순노무, 농업 등 3D업종에 취업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가가 지역공동체의 경제에 미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은 '외국인주민 가정과의 화합이 잘 안되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반면, 주민은 '기존의 한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셋째, 사회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의 사회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결혼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외국인주민의 범죄율·이혼률의 증가로 지역사회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넷째, 문화분야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에 미친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 '지역에서 다문화축제·다문화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다문화사회가가 지역공동체의 문화에 미친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무원과 주민 모두'그들만의 이질적인 패거리문화의 형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화·글로벌화의 지구촌시대에 살면서 우리 국민 모두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민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계를 보면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이 결코 낯선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이웃으로 보일 것이고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인 우리 국민이 소수인 외국인주민에 대해 포용력 있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다르게 다문화사회가 지역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정치, 경제,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이나 법의 제·개정에도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를 전반적으로 다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에 한계가 있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추가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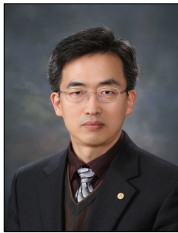
- [1] 김혜순, "결혼이주여성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한국사회학, 제42집, 제2호, 2008.
- [2] Joppke, Christian,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polic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55, No.2, 2004.
- [3] 류정아, "다문화지표 개발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9.
- [4] 최홍,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삼성경제연구원, 2010.
- [5]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i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03.
- [6] 김미나, "다문화사회의 진행단계와 정책의 관점: 주요국과 한국의 다문화정책 비교연구," 행정논총, 제47권, 제4호, pp.193-223, 2009.
- [7] 박진경, 원숙연, "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착성에 작용하는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제44권, 제3호, pp.191-217, 2010.
- [8] 홍기원, "다문화사회의 정책과제와 방향: 문화정책의 역할과 과제," 2007년도 한국행정학회 동계 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7.
- [9] 강휘원,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한국행정학 회총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 [10] 한승준,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2008.
- [11] 최무현,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42권, 제3호, 2008.
- [12] 정광호 외,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 과정 분석: 위탁과 바우처 방식의 비교," 한국공공관리학회보, 제23권, 제4호, pp.231-255, 2009.

[13] Harold Troper and Morton Weinfeld, *Ethnicity, Politics, and Public Policy: Case Studies in Canadian Diversit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99.

저 자 소 개

박 중 관(Jong-Gwan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013년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행정학전공 교수
 - 2010년 1월 ~ 12월 : 서울행정학회 부회장
 - 2012년 1월 ~ 12월 : 한국공공행정학회장
 - 2014년 3월 ~ 현재 :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2015년 1월 ~ 현재 : 한국행정학회 지역부회장
- <관심분야> : 구역개편, 성과관리, 사회자본, 정부기능